

##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중 관계의 미래

정진영 (경희대학교 교수)  
jychung@khu.ac.kr

중국의 부상은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왔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급속히 성장한 중국경제는 우리에게 광대한 시장을 열어주었다. 한국 수출품의 1/4이 중국으로 향한다. 수출주도형 중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국내소비 증대로 소비재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연예인들이나 TV 드라마 등 한류상품의 중국 진출도 활발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가 국내 관광업과 면세점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켰다.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게 했다. 세계적 강대국으로 도약한 중국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 것이고, 한중관계의 발전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갖게 했다. 또한 경쟁과 협력의 미중관계에서 우리는 두 강대국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게 했다.

그러나 지난 해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양국의 결정이 있는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이러한 기대가 환상이었음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한중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냉정히 점검해보고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한중관계의 '리트머스 테스트'(litmus test)라든지 '리얼리티 체크'(reality check)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들은 그리 오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조치이기 때문이고 스스로의 전략적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한국의 정책변화를 가져오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양국은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양국이 체면을 차리는 선에서 타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이러한 전망이 가능한 배경을 따져보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번 한중 갈등은, 다른 한편으로, 양국 관계에 오래도록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이 비로소 매우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서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될 것인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한중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냉정히 점검해보고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한중관계의 '리트머스 테스트'(litmus test)라든지 '리얼리티 체크'(reality check)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중국의 사드 보복

중국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의 8배가 조금 넘는다. 구매력지수(PPP)를 반영하면 11배 이상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375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총 무역수지 흑자의 42%에 해당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한국 수출의 25.1%를 점유하지만, 중국에게 한국은 네 번째 수출시장으로 중국 수출에서 4.3%를 점유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800만 명 정도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의 절반에 가깝다. 이에 비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440만 명 정도로 중국의 외국인 방문객 17% 정도이다(2015년 자료). 우리나라의 대중 경제 의존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제재 카드를 쉽게 꺼낼 수 있는 배경이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들은 오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조치이기 때문이고, 한국의 정책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소위 “한한령”으로 한국 가수들의 공연이나 한국 TV 드라마의 방영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단체 관광객 감축에 이어 아예 금지조치까지 내렸다.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고 크루즈선의 운항도 제한했다.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로 수입을 제한하고,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를 착수했으며,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에 소방점검이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대부분의 지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반한감정이 거세게 일어나 한국 상품 불매운동도 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최근(3월 20일)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현재 수준의 보복조치가 지속되면,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경제가 입을 피해의 규모는 대략 1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중국이 보복조치를 더욱 강화하면 피해규모가 2배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화장품, 면세점, 관광업이 큰 타

격을 입고, 자동차, 휴대폰, 섬유, 석유화학, 해운 등이 중간 정도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보복조치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금융분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국은 한국 국채의 최대보유국으로서 20조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다팔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 만료되는 64조원(3600억 위안) 규모의 한중 통화스왑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위협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외국자본의 탈출을 촉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다. 희토류나 농산물 등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큰 상품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래저래 중국의 경제보복에 취약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돼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여론도 50% 대의 찬성과 30% 대의 반대로 나뉘어져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과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에 국민들이 더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드 배치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가진 진보진영의 대선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결과가 사드배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 한국의 대응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은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 2월 27일에는 롯데그룹이 부지 제공을 위한 절차를 완료했다. 국방부는 3월 6일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3월 7일에는 사드체계의 일부가 오산 미군기지에 전날 밤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사드 배치가 실제적으로 완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여론도 50% 대의 찬성과

30% 대의 반대로 나뉘어져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과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에 국민들이 더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드 배치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가진 진보진영의 대선 후보들이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결과가 사드배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중국 관광객 급감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계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금융지원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물론 업계와 힘을 합쳐 관광업의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광객 유치 노력을 여러 나라로 다변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또한 3월 17일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이사회 총회에서 중국이 유통·관광업 분야에서 WTO 서비스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도 했다.

다른 한편, 정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중국에 항의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갖는 부당함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알림으로써 미국을 통해 중국에 압력이 행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힐러슨 미 국무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거쳐 3월 18-19 양일간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 하원에서는 3월 23일 중국의 사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합의로 제출되었다. 파이낸셜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적 권위지들도 중국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 기사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와는 별개로 반중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치졸한” 행동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반감 형성이다. 우선 중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리고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불매운동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 한중 무역관계에서 소비재 부문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적

자이다. 2016년의 경우 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액은 57.5억 달러였는데 비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54.7억 달러였다. 해외직접 투자의 측면에서도, 중국의 대한국 투자 20.5억 달러보다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가 44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지금껏 한국정부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직접 맞 대응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어느 쪽도 물러서기 어려운 치킨게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중국의 득과 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어느 쪽도 물러서기 어려운 치킨게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경제보복을 시작했을 때, 중국 당국은 경제보복의 위협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실제로 2014년 6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논란이 시작된 이래 2016년 7월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까지 한국정부는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 7월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고 2015년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할 때까지 한중관계는 최고조에 도달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되었고,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중국의 외교적 노력은 성과를 내는 듯 하다가 무산되고 말았다.

중국이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 대선을 통해 진보세력이 집권할 때, 또 한 번 한국의 새 정부를 외교적으로 압박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의 갈등이 이미 치킨게임의 양상을 띠게 된 이상, 한국의 어떤 세력이 집권해도 물러서기 어렵게 되었다. 국내에서 그리고 한미관계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한 사드 배치를 연

기하는 타협안을 한국의 신정부가 제시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중국이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행동에 대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한국을 어느 정도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것이기도 하다. 한류상품들을 금지하고,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제한하며, 한국 화장품 수입을 억제하고, 반한감정으로 한국 상품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분명 한국에게 타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 내부의 관련 비즈니스를 위축시키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한 상품의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의 대부분은 중간재나 자본재로서 수출주도형 중국경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이다. 제3국으로 수입선을 바꿀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중국 수입품은 소비재가 20% 가까이 된다. 중국의 한국 상품 수입제한이나 불매운동이 한국에서 반중감정을 일으키면 중국이 오히려 더 많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며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도 어렵고, 사드 배치 철회라는 군사안보적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만 크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중국의 금융제재도 걱정이다. 한중관계의 파산까지 고려하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다. 한중 통화스왑은 3년 더 연장하기로 이미 합의돼 있지만 중국이 깰 수도 있다. 그러나 한중 통화스왑의 경우 원화와 위안화 사이의 스왑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 줄 수 있는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중국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국채나 채권들을 내다파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3,700억 달러 수준이고, 단기채무가 1,000억 달러 수준이며, 우리나라가 해외자산이 해외부채보다 많은 순채권국임을 고려할 때, 중국의 금융보복이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정도의 위기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도까지 중국의 사드 보복이 확대되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며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도 어렵고, 사드 배치 철회라는 군사안보적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만 크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중국은 얼마 전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WTO에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라는 싸움을 제기했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이유로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가하는 것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 포럼이나 자국이 주최한 보아오 포럼에서 강조하는 다자적 자유무역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중국의 이미지도 크게 손상될 것이다. 물론 중국은 지금까지 교묘하게 WTO나 한중 FTA 상의 중국의 양허(의무)를 명백히 위배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의 칼날을 들이대려고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규정을 명백히 어기는 데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사드 보복은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중국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 한국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떠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으로 하여금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중국의 압력을 피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자칭귀 원장이 3월 13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상무위원의 자격으로 공개적으로 사드 보복 중단을 요청한 이면에는 중국의 이러한 복잡한 계산이 반영돼 있을

것이다.

양국의 서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고, 이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엄연한 국제관계의 현실과 부딪히면서 서로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바뀌었다. 과잉 기대가 큰 실망을 낳은 것이다.

## 한중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급속히 가까워졌다. 양국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고, 한국은 수출과 투자를 위해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 필요했다. 한국은 북한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을 원했고, 중국은 미국의 봉쇄정책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국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자 했다. 한국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기대가 만들어졌고, 중국에서는 한국이 미국 중심의 한미일 동맹체제에서 약한 고리라는 인식이 만들어졌다.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한중 밀착을 빗대어 한국의 “중국경사론”이라며 우려했다. 그런데 지난해 중반부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과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표출되면서 한중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했다. 양국의 서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고, 이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엄연한 국제관계의 현실과 부딪히면서 서로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바뀌었다. 과잉 기대가 큰 실망을 낳은 것이다.

이제 두 나라는 서로에 대해 냉엄한 현실에 기초한 인식과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

이 북한을 버릴 수 있다거나 미국을 대신하여 한국의 우방이 될 수 있다는 기대는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미중관계에서 중국 편을 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역시 너무 비현실적이다. 양국 관계는 이제 현실의 바탕에 기초해서 재정립돼야 한다. 과잉기대는 잘못된 정책을 낳는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한국이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하도록 하려면 역시 우리에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한국이 막아주기를 원한다면, 한국을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아 주어야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WTO와 한중 FTA의 실정법적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않더라도 그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이다. 중국의 세계적 리더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당당해야 한다. 중국의 불법적 행위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도 중국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두려워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중국의 보복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우리의 대중국 협상력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다. 대외 정책을 둘러싼 국내 정치적 대립이 초래하는 치명적인 결과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을 겪으면서 우리가 얻게 된 값비싼 교훈이다.